

## 2020. 1.11. 경위승진 경찰실무종합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 1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 ②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 ③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국가 등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 ④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해설** → ② (X)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핵심정리 15p>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4~16p>

**정답** ②

###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위 ②와 관련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위 ②, ③과 관련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② 동강령 제4조 제1항  
 ③ 동강령 제4조 제2항

- ④ (X) 위 ②, ③과 관련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강령 제4조 제3항). <핵심정리 25~30p>

**정답** ④

**3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화염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 - 차일혁
- ②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강조 - 최규식
- ③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 - 정중수
- ④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 김구

**해설** → ② (X)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강조한 사람은 안병하 치안감이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39~40p>

[핵심정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김구 선생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최규식 경무관, 정중수 경사	① 호국경찰의 표상 ②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종로경찰서 지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차단·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함 ③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중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열임
차일혁 경무관	①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 ②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운동, 광복 후 우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에 도움을 줌 ③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1953년)로 빨치산 토벌의 주역임 ④ 빨치산 토벌 당시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⑤ 공비들의 근거리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짜만 태움으로써 화염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음
안병하 치안감	① 민주경찰·인권경찰의 표상 ②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1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 ③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은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6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 ① (X)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3항). <핵심정리 48p>  
 ② 동법 제6조 제3항 <핵심정리 48p>  
 ③ 동법 제6조 제4항 <핵심정리 48p>  
 ④ 동법 제6조 제1항 <핵심정리 48p>

**정답** ①

7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의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보통 대리는 임의대리를 의미한다.
- ②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해설** → ③ (X)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피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핵심정리 52p>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51, 52p>

[핵심정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구 분	임의대리	법정대리
발생원인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사실 발생 시 직접 법령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범 위	일반적·포괄적 권한에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
책임·지휘·감독	대리자는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대리권행사, 지휘·감독을 받음	대리자의 모든 책임하에 권한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은 불가
복대리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가능함

기 타	보통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를 의미하며, 임의대리는 수권대리 또는 위임대리라고도 함	다시 협의의 법정대리(보충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짐
-----	---	-------------------------------

정답 ③

**8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② 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 ③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설** →

- 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핵심정리 65p>
- ② (X)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직위해제 대상이다. 감봉은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핵심정리 65p>
- ③ 동법 제73조의3 제2항 <핵심정리 65p>
-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65p>

[핵심정리] 직위해제

성질	①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②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직위해제 사유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개월의 범위 내)(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 ②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동항 제3호)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동항 제4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동항 제5호)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동항 제6호)
효력	①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출근할 의무도 없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정답 ②

**9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 ②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 ③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복 착용’은 경찰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 ④ 국가공무원법 상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핵심정리 69~72p>

- ① (X) 명시적 규정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핵심정리 69p>
- ② (X) 친절·공정의 의무는 직무상의 의무이다(동법 제59조). <핵심정리 70p>
- ③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핵심정리 71p>
- ④ (X)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핵심정리 70p>

**정답** ③

**10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③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3분의 1을 감액한다.
- ④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3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8분의 7을 지급한다.

-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  
 ② 동법 제80조 제1항  
 ③ (X)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한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④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상 핵심정리 75p>

[핵심정리] 징계의 종류

종류	내용	
중징계	파면	① 공무원으로서 신분박탈 ②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4 감액, 5년 이상인 경우 1/2 감액,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2 감액
	해임	① 공무원으로서 신분박탈 ②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전액 지급되나,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8, 5년 이상인 경우 1/4 감액,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4 감액
		배 제 징 계

중징계	강등	① 공무원신분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정지 ② 3개월간 보수의 전액 감액	교 정 징 계
	정직	① 공무원신분 보유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정지 ② 정직기간 중 보수의 전액 감액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1/3 감액	
	견책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회개하게 함	

정답 ③

**11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위법하지 않다.
- ③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 해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핵심정리 84p>  
 ② (X)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핵심정리 84p>  
 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84p>

[핵심정리] 경찰비례의 원칙

의의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과잉금지 원칙) →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필요한 최소한도에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불문법 원칙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원칙)
적용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원리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됨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위반의 효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세부 원칙	행정청의 특정 행위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적합성의 원칙),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작으며(필요성의 원칙),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함(상당성의 원칙 - 협의의 비례 원칙) →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려면 세부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임
관련 판례	집회장소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회 참가행위가 불법이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13. 2007도9794).

정답 ②

**12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 행위이다.
- ②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금지’라 부르기도 한다.
- ③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위하명이다.
- ④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④ (X)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상 핵심정리 87p>

[핵심정리] 경찰하명

개 념	①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임 ② 하명 가운데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 부르기도 함
성 질	개인에게 특정의무를 명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임
종 류	작위하명(예 집회신고의무), 부작위하명(예 공공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 급부하명(예 면허시험의 수수료 납부), 수인하명(예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극장주가 출입을 허용할 의무)이 있음
효 과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함.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침
위반의 효과	경찰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 위반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 집(단, 하명에 위반한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음 -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 맥주를 판매한 경우 맥주 매매행위 효력은 부인되지 않음)
구 제	① 적법한 하명인 경우에는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단, 예외적으로 경찰상 적법한 행위로 수명자 또는 책임 없는 제3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이념에 배치될 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며, 이것이 경찰상 손실보상청구임 ②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정답** ④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②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구호대상자 중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임시로 영치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설** → ① (X)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핵심정리 97p>  
② (X)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보호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핵심정리 97p>  
③ (X)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핵심정리 97p>  
④ 동법 제4조 제7항 <핵심정리 97p>

**정답** ④

####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장 등이 지명한다.  
④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해설** → ① (X)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105p>  
② (X)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호). <핵심정리 105p>  
③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106p>  
④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 <핵심정리 106p>

**정답** ④

#### 15 막스 베버(M. Weber)의 '이상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의해 규정된다.  
② 직무의 수행은 서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구성된다.  
④ 구성원 간 또는 직무 수행상 감정의 배제가 필요하다.

- 해설** → ① (X)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이상 핵심정리 111p>

[핵심정리] 막스 베버의 관료제 특성

법규 중시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됨
계층제 조직	직무조직은 계층제적(수평적×) 구조로 구성됨
문서주의	직무의 수행은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장기간 보존됨
물인정성	구성원 간 또는 직무 수행상 감정의 배제가 필요함
분업과 전문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분업과 전문화가 필요함

**정답** ①

**16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해설** → ① (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2조). <핵심정리 117p>  
 ② 동법 제32조 <핵심정리 117p>  
 ③ (X)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핵심정리 117p>  
 ④ (X)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동법 제47조 제1항). <핵심정리 118p>

**정답** ②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

-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 ②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 ④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2호). <이상 핵심정리 121p>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함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회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관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①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②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③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①

**18**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 제한구역에 모두 고른 것은?

㉠ 정보통신실	㉡ 과학수사센터
㉢ 암호취급소	㉣ 발간실
㉤ 치안상황실	㉥ 작전·경호·정보·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① ㉠㉡㉢㉣

② ㉠㉢㉤㉥

③ ㉠㉡㉣㉥

④ ㉡㉢㉤㉥

**해설** → ㉔㉕은 통제구역이고, ㉖㉗㉘㉙ 항목이 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127p>

[핵심정리] 보호구역의 설정기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한구역	통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li> <li>발간실(경찰기관)</li> <li>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계센터</li> <li>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li> <li>작전·경호·정보·보안업무 담당 부서 전역</li> <li>과학수사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호취급소</li> <li>정보보안기록실</li> <li>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li> <li>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li> <li>암호장비관리실</li> <li>정보상황실</li> <li>비밀발간실</li> <li>종합조회처리실</li> </ul>

**정답** ③

**19 경찰 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경찰위원회 제도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에도 해당한다.
- ③ 청문감사관 제도는 경찰 내부적 통제이다.
- ④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행정에 대한 사전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 ① (X)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기본서 275p>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37p>

[핵심정리] 경찰통제의 유형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는 보기 어려움), 국민감사청구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 국가배상 등	
사전통제	행정절차법(청문,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등),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등	
사후통제	사법부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입법부	국회의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 등
	행정부	행정심판, 징계책임,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
내부통제	(청문) 감사관제도	청문감사관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1999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임
	훈령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감독권 행사를 통해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함
	직무명령권	상급자가 하급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을 통해 행위를 통제

외부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경찰의 입법과정, 예산 책정과 결산과정 및 경찰행정에 대하여 감사·조사함으로써 통제
	경찰위원회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통해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임)
	사법통제	위법한 경찰행정작용을 억지하는 통제효과
	행정부에 의한 통제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함
	감사원에 의한 통제	경찰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뿐만 아니라,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통제(행정부에 의한 통제임)
	국가인권 위원회에 의한 통제	독립기관이므로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임
	민중통제	여론, 이익집단, 언론기관, 정당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통제

**정답** ①

**20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①과 같은 요구를 받은 소속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7조 제1항
- ② 동규칙 제17조 제2항
- ③ 동규칙 제36조 제1항
- ④ (X)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동규칙 제32조 제1항). <이상 핵심정리 147~150p>

**정답** ④

**2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에는 조명·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가 있다.
- ② 영역성의 강화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④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는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해설** →

- ① 자연적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핵심정리 167p>
- ② (X) 지문은 자연적 접근통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핵심정리 168p>
- ③ (X) 지문은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168p>
- ④ (X) 출입구의 최소화부분은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이다. <핵심정리 168p>

[핵심정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원리	개념	예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반(半)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정답** ①

**22**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BS란 Location Based Services의 약자로 휴대전화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 ② Cell방식은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를 판단하며 모든 휴대전화에 사용가능하나 위치오차가 크다.

- ③ GPS방식은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하며 위치오차가 비교적 정확하지만 건물내부나 지하 등에서는 측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 ④ Wi-Fi방식은 휴대전화의 Wi-Fi가 연결된 무선AP(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를 나타내며 Cell방식과 비교하여 위치가 현격히 다른 경우 Wi-Fi값 위치를 신고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해설** → ①②③ 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④ (X) Wi-Fi방식은 휴대전화의 Wi-Fi가 연결된 무선AP(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를 나타내며 Cell방식과 비교하여 위치가 현격히 다른 경우 Cell값 위치를 신고자의 위치로 추정한다. <이상 핵심정리 170,171p>

[핵심정리] 측위기술의 종류 및 특징(112신고 접수 · 지령 매뉴얼)

구분	측위 방식	특징	주의
Cell 방식	휴대전화에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판단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 실내·지하 등에서도 측위 가능, 수백m(도심지) ~ 수km(개활지)의 위치오차 발생	
GPS 방식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를 측정	기본 오차가 수십m로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에 GPS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2G폰) GPS를 꺼 놓은 경우, 건물내부, 지하 등에서는 측위 불가능	단, 신고자가 아파트 등 건물의 창가, 베란다, 옥상과 같이 개방된 곳에 위치시 측위 가능함으로 GPS위치 결과값이 건물과 근접한 경우에는 건물내부에 신고자가 위치한 경우도 있음에 유의
Wi-Fi 방식	휴대전화 Wi-Fi가 연결된 무선AP(Access Point,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위치를 통한 측위	GPS 방식보다는 떨어지나 Cell 방식보다는상대적으로 정확한 측위 가능(기본 오차 수십m), 지하나 건물 내에서도 측위 가능하지만, AP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외지역에서는 측위 곤란	Cell값과 Wi-Fi 위치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 Cell값 위치를 신고자 위치로 추정 ※ Cell값은 서울, Wi-Fi값은 부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Wi-Fi AP(인터넷 무선공유기) 소유자가 부산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였으나 통신사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은 Cell값과 Wi-Fi값 위치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 있음

**정답** ④

### 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실종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보호 시설 무연고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해설** → ① (X)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핵심정리 187p>
-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핵심정리 187p>
- ③ (X)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입력대상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핵심정리 188p>
- ④ (X) ‘아동등’이란 ㉠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핵심정리 186p>

**정답** ②

###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하다.
- ④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니다.

- 해설**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 <핵심정리 191p>
- ② 동법 제21조 제1항 <핵심정리 192p>
- ③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동법 제15조 제1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동법 제16조). <핵심정리 192p>
- ④ 동법 제2조 제4호 <핵심정리 193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정답 ③

**25 다음 중 수사구조개혁 찬성 측에서 채택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소 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②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
- ③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 ④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사지휘 역량 및 수사 과정의 인권보장제도 강화와 수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 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다양한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설** → ③ (X) 수사구조개혁 반대론의 논거이다. (핵심정리 201P)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200,201p>

[핵심정리] 경찰수사권 독립(조정) 찬반론

찬성론의 논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국민의 편익 저해)</li> <li>②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함(명령통일원리 위배)</li> <li>③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현실과 법규범의 괴리)</li> <li>④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음(검찰로의 권력집중)</li> <li>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보다는 경찰에 집중되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음(권한과 책임의 불일치)</li> </ol>
---------	--

반대론의 논거	①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함(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②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쉬움(적정절차와 인권존중) ③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全)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음(법집행의 왜곡방지) 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경찰로의 권력집중)
------------	--

정답 ③

**26** 다음 중 시체의 초기현상 및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되고,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6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 ②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 등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이다.
- ③ 아질산소다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갈색(황갈색)을 나타낸다.
- ④ 사이안화칼륨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적갈색을 나타낸다.

- 해설** → ① (X)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되고,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핵심정리 248p>
- ② (X) 자가용해는 미생물의 관여 없이도 세포가운데의 자기효소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 세포구성성분은 분해되어 변성되고 세포간 결합의 붕괴로 조직이 연화되는 것으로 부패균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핵심정리 248p>
- ③ (O) 시체얼룩 중 아질산소다, 염소산칼륨의 중독은 암갈색(황갈색)을 나타낸다. <핵심정리 248p>
- ④ (X) 시체얼룩 중 암적갈색을 띠는 것은 통상 목땀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에서 발생한다. <핵심정리 248p>

[핵심정리] 사체의 초기현상(물리적 변화)

체온의 냉각	① 사망 후에는 체열이 방출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게 됨.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 증발로 주위의 온도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 ② 체온은 항문에 검온기(檢溫器)를 삽입하여 곧창자 내의 온도 측정
시체건조	① 사망 후에는 수분의 공급이 정지되므로 몸의 표면은 습윤성(濕潤性)을 잃고 건조하게 됨 ② 피부·입술·항문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피혁상화(皮革狀化)
각막의 혼탁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됨
시체얼룩	①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되고 중력에 의하여 적혈구가 신체의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 <u>혈액침전(血液沈澱) 현상</u> 때문에 시체의 피부 하부가 멍이 든 것처럼 <u>암적갈색(暗赤褐色)</u> 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함 ② 시체얼룩은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나타남

시체얼룩	③ 통상 목땀 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는 암적색을 띠며,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에라도 차가운 곳에 둔 경우, 일산화탄소나 청산가리 중독의 경우에는 선홍색을 띠며,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띠며, 황화수소가스 중독의 경우에는 녹색갈색을 띠며 ④ 시체얼룩을 통해 사망 당시의 시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시체굳음	① 사망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고정되어 시체가 뻣뻣해지는 현상을 말함 ②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침 ③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 · 발가락 순으로(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됨

정답 ③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③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핵심정리 193p>  
 ② 동법 제11조 제1항 <핵심정리 194p>  
 ③ 동법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194p>  
 ④ (X)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2조 제1항). <핵심정리 194p>

정답 ④

**28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②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 ③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 ④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일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이 원칙이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http://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해설** → ③ (X)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핵심정리 273p>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273~274p>

**정답** ③

**29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호비상 시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② 경계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
-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④ 비상근무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해설** → ① (X) 병호비상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핵심정리 290p>

② (X) 경계강화 시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하고, 작전준비태세 시에는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핵심정리 290p>

③ (X)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핵심정리 290p>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핵심정리 291p>

[핵심정리] 비상근무요령

	가용경력 동원	지휘관과 참모의 근무형태
갑호 비상	100%	정착 근무(연가 중지)
을호 비상	50%	정위치 근무(연가 중지)
병호 비상	30%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연가 억제)
경계 강화	×	지휘선상 위치 근무
작전준비태세	×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정답** ④

**30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B’급 다중 이용건축물등의 경우 테러에 의해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C’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의 경우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며, 관할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http://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핵심정리]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①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보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p> <p>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p>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p> <p>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p> <p>⑥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p>⑦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주차 금지 장소	<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됨</p> <p>① 터널 안 및 다리 위</p> <p>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p>㉠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p> <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p> <p>③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p>

정답 ①

**3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과거 3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④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해설** → ③ (X)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처분기준의 감경).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바. 처분기준의 감경). <핵심정리 322p>

[핵심정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등

감경사유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감경 제외사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정답 ③

**33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②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③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무면허운전 금지를 3회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제한된다.

**해설** →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핵심정리 316p>
- ②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핵심정리 317p>
- ③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핵심정리 321p>
- ④ (X) 무면허운전 3회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제한된다 (동법 제82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318p>

정답 ④

**34 정보를 출처에 따라 분류할 때 그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본출처정보는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이다.
- ② 비밀출처정보란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정보이다.
- ③ 정기출처정보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로 일반적으로 우연출처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간접정보란 중간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로 정보관은 이들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감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해당 매체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직접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 해설** → ① (X) 근본출처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로 부차적 출처정보(간접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지문은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346p>
- ② (X) 비밀출처정보란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보를 말한다. 지문의 내용은 우연출처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346p>
- ③ (X) 일반적으로 정기출처정보가 우연출처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정리 346p>
- ④ 간접정보(부차적 출처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핵심정리 346p>

**정답** ④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위 ①에 따른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해설** → ① (X)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핵심정리 368p>
- ② (X)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핵심정리 369p>
- ③ 동법 제13조 제2항 <핵심정리 372p>
- ④ (X)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핵심정리 372p>

**정답** ③

**36** 다음은 공작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연락'이란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이다.
- ㉡ '신호'란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 ㉢ '사전정찰'이란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 ㉣ '감시'란 장차 공작활동을 위하여 공작 목표나 공작 지역에 대하여 예비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이다.

- ① ㉠(X) ㉡(O) ㉢(O) ㉣(X)
- ② ㉠(X) ㉡(O) ㉢(O) ㉣(O)
- ③ ㉠(O) ㉡(X) ㉢(X) ㉣(X)
- ④ ㉠(O) ㉡(O) ㉢(X) ㉣(X)

**해설** → ㉠㉡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393p>

- ㉢ (X) '사전정찰'이란 장차 공작활동을 위하여 공작 목표나 공작 지역에 대하여 예비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을 말한다. 지문은 관찰모사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393p>
- ㉣ (X) '감시'란 공작대상의 인물, 시설, 물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시각이나 청각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문은 사전정찰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393p>

[핵심정리] 공작활동의 유형

가장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를 말함
연락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함
신호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함
관찰모사	관찰이란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이며, 모사란 관찰한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
사전정찰	장차 공작활동을 위하여 공작 목표나 공작 지역에 대하여 예비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
감시	공작대상의 인물, 시설, 물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시각이나 청각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기술

**정답** ④

**3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②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③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④ 위장탈출 혐의자

- 해설** → ① (X)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②③④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 <핵심정리 415p>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답** ①

**38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 ②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 대상이다.
- ③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강제퇴거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핵심정리 427p>  
 ② (X)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핵심정리431p>  
 ③ <핵심정리 432p>  
 ④ 동법 제12조의2 제3항 <핵심정리 427p>

[핵심정리] 외국인의 등록

등록대상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제외대상	① 주한외국공관(대사관·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②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③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외교부장관 X)으로 정하는 사람

**정답** ②

**39 다음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흑색수배서(가출인수배서) -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발부
- ② 녹색수배서(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 우범자 정보제공 목적 발부
- ③ 보라색수배서(범죄수법수배서) - 범죄수법 정보제공 목적 발부
- ④ 청색수배서(국제정보조회수배서)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목적 발부

**해설** → ① (X) 실종자 소재확인 목적 발부하는 것은 황색수배서(가출인수배서)이다. <핵심정리 448p>

[핵심정리] 국제 수배서의 종류(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경찰청)

적색수배서 (국제체포수배서)	Red Notice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 인도
청색수배서 (국제정보조회수배서)	Blue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
녹색수배서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Green Notice	우범자 정보제공
황색수배서 (가출인수배서)	Yellow Notice	실종자 소재확인
흑색수배서 (변사자수배서)	Black Notice	변사자 신원확인
보라색수배서 (범죄수법수배서)	Purple Notice (Modus Operandi)	범죄수법 정보 제공
오렌지수배서	Orange Notice (Security Alert)	위험물질 경고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INTERPOL- UN특별수배서	INTERPOL-UN Special Notice	인터폴과 UN안보리의 협의사항에 따라 발부

**정답** ①

**4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암살범은 예외가 되어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된다.
-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453p>  
② 동법 제6조 <핵심 정리453p>  
③ 동법 제9조 제4호 <핵심 정리453p>  
④ (X)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핵심정리 454p>

**정답** ④